

【신간소개】

변경에서 중심을 지향하며

- 최덕규, 『근대 한국과 동아시아 변경연구: 글로벌히스토리 시선으로 본
변경문제』, 경인문화사, 2016 -

유 하 영*

저자는 서론에서 제국주의 시대 유라시아 대륙을 무대로 펼쳐진 유럽 중심의 그레이트 게임 현상을 동아시아에 적용하며 문명론적 입장에서 변경과 중심의 의미를 정의하여 동아시아 국경을 논급하였다. 더 나아가 전편에 걸쳐 글로벌히스토리(global history)의 관점에서 대담하고도 정교한 논리로 동아시아의 역사적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탁월한 견지에서 중심과 변경의 문제를 연구한 대단히 창의적 결과물이다.

저자는 국내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학자인 러시아 국제법학자 마르텐스(Martens F.F.)의 저서를 매우 적절하게 인용하고 있다. “유럽중심주의적 문명론의 확산과 파괴적인 무력 사용의 제한은 중재재판을 통해 해결한다는 법치사상으로 발전했다. 재판을 통해 분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쟁을 해결한다는 반전사상은 인류역사와 함께 해온 전쟁의 소멸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부풀렸다.”(3쪽) 그러나 일본은 국제분쟁의 평화적, 사법적 해결 방식의 하나인 중재재판제도를 거부하였고, 일본과 경계를 인접한 국가들의 경계선은 침략과 탐욕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러일전쟁 이후 동아시아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타협을 추구했던 러시아는 일본의 파트너로서 중국의 북방변경 벨트의 분할에 서로 공조하였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과 러시아가 만주를 남북으로 분할한 1907년 제1차 러일협약을 시작으로 몽골과 한국을 각각의 세력권으로 상호 인정한 1910년 제2차 러일협약 그리고 내몽골을 동서로 분할한 1912년 제3차 러일협약”을 들고 있다.

이 책은 근대 동아시아사 및 국제관계를 연구한 저자가 최근년에 발표한 연구논문을 수정 보완하고 주제에 연동된 새로운 주제와 분야를 추가하여 단행본으로 출간한 것이다. 이하 각 장별로 그 내용을 요약하고 마지막에 신간소개자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한다.

우선 책의 목차는 아래와 같다.

서론: 글로벌히스토리의 시선으로 본 변경문제

제1장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과 거문도사건(1885~1887)

1. 거문도사건에 대한 연구와 글로벌히스토리
2. 영국해군의 거문도 점령과 러시아 해군상의 사건인식과 해법
3. 웨스타코프 제독의 거문도 시찰과 한반도 해안 탐사
4. 리홍장-라디젠스키 협약과 영국 해군의 거문도 철수
5. 영러대립이 한반도에 미친 영향

제2장 러시아의 제2태평양함대와 일본의 독도 점취(1904~1905)

1. 러일 해전사와 독도
2. 러시아 황제 니콜라이 II 세와 태평양함대 증강정책

3. 러일전쟁과 러시아의 제2태평양함대의 편성
4. 제2태평양함대의 극동원정과 일본의 독도 점취
5. 러일전쟁과 헤이그평화회의

제3장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문제(1909~1910)

1. 간도문제의 글로벌히스토리
2. 일본의 만주침략과 미국의 대일견제
3. 미국의 만주철도중립화정책과 일본의 대러접근정책
4. 제2차 러일협약체결(1910)과 일본의 한국병합
5. 간도문제와 만주의 문호개방 지지자와 반대자

제4장 제3차 러일협약과 내몽골 분할문제(1912)

1. 만몽(滿蒙)문제와 발칸문제의 연동
2. 일본의 만몽 분리정책과 미국의 만주 문호개방정책
3. 영일동맹의 약화와 일본의 대러(對露)접근
4. 제3차 러일협약(1912)과 내몽골의 분할: 만몽과 발칸문제의 연동
5. 러일의 내몽골 분할협약과 유럽의 국제관계

제5장 중소 국경문제와 전바오도(珍寶島)사건(1969)

1. 중국과 소련의 국경사
2. 중소 국경문제의 제기와 제1차 국경교섭
3. 전바오도사건과 제2차 국경교섭
4. 제3차 국경교섭과 중러 국경문제의 해결
5. 중소 국경문제의 해결과 남겨진 문제

제6장 중러 국경문제의 해결과 헤이사쯔도(黑瞎子島)

1. 동아시아 영토문제의 새로운 해법: 면적균등분할론

2. 헤이샤쯔도 문제의 역사적 배경: 러시아의 만주침략과 중동철로(中東鐵路) 부설
3. 중동철로사변과 소련의 헤이샤쯔도 점령
4. 러시아의 헤이샤쯔도 반환과 그 함의

제7장 동아시아 냉전체제와 남쿠릴열도

1. 쿠릴열도의 변화와 배경
2. 미소 전시동맹(戰時同盟)과 쿠릴열도
3. 루즈벨트가 스탈린에게 쿠릴열도를 넘긴 까닭
4. 미소 전시동맹의 유산과 동아시아 냉전체제

결론: 동아시아 변경연구의 새로운 방법론 - 글로벌히스토리

<제1장.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과 거문도사건(1885~1887)>에서는 영국해군의 불법적인 거문도 점령이 흑해에서 러시아함대의 통제방식을 극동해역에 적용하려는 시도였음을 밝혔다. 이를 위해 1885년 불가리아 위기와 거문도 위기를 연동시킴으로써 영국해군이 터키 해협(보스포러스, 다다넬스 해협)의 봉쇄를 통해 러시아 해군이 흑해에서 지중해로 진출하려는 시도를 좌절시켰던 사례를 극동의 대한해협 사례에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당시 “제국주의 시대 영리해군의 전략적 차원에서 ‘발칸반도와 한반도의 접속’, ‘터키해협과 대한해협의 연동’이라는 근동과 극동의 해협문제를 상호 접속과 연동의 맥락에서 분석하였다.”

<제2장. 러시아의 제2태평양함대와 일본의 독도 점취(1904~1905)>에서는 1898년 차르정부가 청국으로부터 조차한 라오둥반도의 뤄순과 다렌 항에 대해 막대한 투자에 나선 것은 그들 항구를 각각 군항과 무역항으로 개발하기 위함이었다고 적시한다. 이후의 하얼빈에서 뤄순, 다렌을 잇는 남만지선의 부설과 뤄순항의 요새화 작업은 러시아를 태평양의 해양강국으로 부상

시키기 위한 차르정부의 동아시아정책의 산물로 파악한다. 그러나 태평양함대의 증강을 위한 방위비 지출의 증대는 러시아 국가경제에 부담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 러시아의 제2태평양함대의 성패는 로마노프왕조의 운명을 가늠할 역사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결국 러일전쟁의 “패배”는 차르 체제의 붕괴와 동시에 볼셰비키 혁명을 촉진하게 된 것이다.

<제3장. 제국주의 열강의 만주정책과 간도문제(1909~1910)>에서는 1910년 만주철도 중립화안, 동청철도(1904, 80년조차, 36년 중에 매각가능), 진주-애훈선, 남만철도, 길회철도(吉會鐵道) 등 철로부설과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제국주의 열강간의 정책추진을 다루었다. 만주철도의 중립화에 대한 미국무장관 녹스(Philander C. Knox)의 제안은 만주에서 기득권 세력이었던 일본과 러시아에게 대미 공동전선 구축의 필요성을 공감토록 함으로써 주러일본공사 모토노 이치로(本野一郎)는 제2차 러일협약 체결을 러시아에 제안했다. 러시아 역시 이 지역에 대한 방위계획이 완료될 때까지 일본과의 타협이 필요했던 바 일본의 한국병합을 승인하게 되었다. 결국 간도협약(1909)은 한중일 3국간의 국경문제가 아니라 제국주의 열강과 일본의 타협으로 이루어진 러일전쟁의 전후처리의 산물이며, 러시아로 하여금 일본의 한국병합을 묵인하는 결정적인 계기였다.

<제4장. 제3차 러일협약과 내몽골분할문제>에서 필자는 만몽(滿蒙) 문제와 발칸문제를 연동하는 글로벌히스토리의 관점에 입각하여 그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필자는 신해혁명 시기 중국 서북변경의 위기와 유럽의 발칸 위기의 상관성을 구명하였다. 왜냐하면 당시 만주, 몽골, 신장, 티베트로 이어지는 중국 서북변경 벨트의 위기는 고립된 개별위기가 아니라 유럽 발칸반도의 위기와 연동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위 ‘면적균등’ 분할론은 2004년 중·러 국경획정 협상에서 아무르·우수리강 합류점의 볼쇼이 우수리스크(Большой Уссурийск, 중국명 黑瞎子島) 섬을 중국과 러시아가 절반씩 나누기로 한 사례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 또한 100여년 전 러일 양국이 제3차 러일협약을 체결하여 내몽골을 동서로 분할하기로 합의한 역사적 사례는

제국주의 시기 외교적 타협을 통한 영토분할의 대표적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러시아와 일본의 내몽골분할협정(1912. 7. 8)의 체결과정을 분석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제5장. 중소 국경문제와 전바오도(珍寶島) 사건(1969)>에서는 중소국경문제를 단순한 양국 간의 영토문제가 아닌 동아시아 냉전사의 시각에서 분석했다. 1969년 전바오도 사건을 계기로 중국의 주요 핵시설을 파괴하는 소위 “한정적인 핵외과수술론”을 구상했던 소련이 이를 철회한 배경에는 미국의 개입가능성에 대한 주미 소련대사의 보고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양국관계와 국경문제의 상관성에 대한 고찰은 중소국경문제가 1969년 전바오도에서 양국 국경수비대간의 유혈 무력 충돌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푸틴과 후진타오가 “양국 사이에는 더 이상 영토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중러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한 논리적 모순을 이해하는 유효한 분석틀이 되었다.

<제6장. 중러 국경문제 해결과 헤이사쯔도>에서는 중러관계 복원의 상징으로 러시아가 중국에 반환한 헤이사쯔도 분할 문제를 다뤘다. 중소관계사에서 최대 규모의 무력충돌 사례의 하나는 이른바 ‘중동철로사변’(1929. 7.10.~12.3.)이다. 중동철로를 둘러싼 중소교전은 다시 1931년 9월 18일 일본이 만주사변을 도발하는 조건을 제공하였다. 결국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35년 3월 23일 소련과 일본 및 만주국 대표들은 도쿄에서 중동철로 매각협정 및 부속문건에 서명함으로써 소련은 중동철로 부설권을 획득한 1896년 이후 약 40년 만에 만주에 부설한 자국 철로망을 일본에게 양도하게 되었다. 이로써 청일전쟁 후 삼국간섭을 통해 획득한 중동철로는 일본에 매각되었다.

1991년 체결된 중소 동부국경협정과 일반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제하천”의 중심수로와 주 항로의 중앙이 국경선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헤이사쯔도는 하천의 수로가 변경됨으로써 자연적으로 형성·변경된 하중도이다. 2004년 10월 14일 하바롭스크 인근 헤이사쯔도와 타라얼로프섬(인롱

도, 銀龍島)를 제외한 중러 동부국경보충조약이 체결되었다. 2007년 3월 26일 중러 양국은 그 해 연말까지 헤이샤쯔도의 국경획정을 완료하기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11월 국경표식 설치를 완료하여 오랜 국경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었던 헤이샤쯔도의 중러 분할 영유가 이루어졌다.

<제7장. 동아시아 냉전체제와 남쿠릴열도>에서는 쿠릴열도 문제를 러일 양국의 시각에서 다루던 종래의 연구방법론에서 탈피하여 국제관계사라는 시각에서 이 문제를 검토하였다. 이는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시동맹국이었던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알타회담에서 합의되었던 쿠릴열도에 대한 주권을 인정받지 못한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었다. 그 원인은 냉전의 시작과 맞물려 있다. 1956년 9월 5일 미 국무장관 덜레스가 일본정부에 보낸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의해 이미 포기한 영토에 대해 주권을 넘겨줄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 역사적 사실들을 검토해본 결과, 에토로푸와 쿠나시리는 (홋카이도와 일부를 이루고 있는 하보마이와 시코단처럼) 항상 일본 본토의 일부를 이루고 있었고 일본의 주권 하에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근대 한국과 동아시아 변경을 5곳의 섬 즉 거문도, 독도, 전바오도, 헤이샤쯔도, 남쿠릴열도와 2곳의 다른 접경지대 즉 간도, 내몽골 문제를 중심으로 중한, 중러, 중일 등 동북아 국경관련 연구 성과를 체계적으로 종합한 것이다. 필자는 “향후 연구는 변경이 중심부의 지형을 어떻게 바꿔 놓았는지 주변부의 시각에서 살펴보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글을 마무리하였다.

이 책의 소개자는 앞으로 국경연구자는 필수적으로 조약 체결 및 협상 과정과 조약문언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국제법의 확립된 원칙상 “조약”은¹⁾ 조약체결 당사자 간에만 법적 효력이 있음을 원칙

1)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조 (a) “조약”이라 함은 단일의 문서에 또는 2 또는 그 이상의 관련문서에 구현되고 있는가에 관계없이 또한 그 특정의 명칭에 관계없이, 서면형식으로 국가간에 체결되며 또한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제적 합의를 의미한다.

으로 하지만 비록 타국간의 조약이라 할지라도 그 해석과 유사 조약체결의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국제법상의 법률용어 사용은 주석 등 적절한 인용 표시를 해둠으로써 자칫 범할 수 있는 심대한 오류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끝으로 홍콩 및 마카오 2개 특별행정구를 포함하여 총 16개 국가와 육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그들의 “중심”과 “변경”의 단순 구분법은 다소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해 둔다. 왜냐하면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는 국가를 대등한 이웃국가 아닌 지극히 중국 자국 중심적이고 적대적, 배타적 국가로 이해하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투고일 : 2017년 5월 29일,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10일